

프랑스 정치부패
-에바 졸리의 수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rench Political Corruption

문 성 호(Moon, Sung Ho)*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the French political corruption to Korean experts on political corruption,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Magistrate Eva Joly and trying to compare these to Korean ones. It ranges from the simple biography of her, the French investigation and judiciary system, the French police's investigations on political corruption, French corruption network, a variety of corruptions after defeat of Germany, the lessons from the trial of Elf, the pressures on Eva to resign, international level of French political corruption and structural causes of French corruption, to Paris Declaration in 2003. In addition, it trie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activity of Eva in comparing it with the Korean case.

Key words: Political Corruption, France, Eva Joly

*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정치학박사

I. 머리말

이 논문은 주로 에바 졸리(Eva Joly)라는 프랑스의 한 여성 수사관사(Juge d'instruction, 대략 우리나라의 검사에 해당함)가 벌인 프랑스 정치부패 수사과 그 성과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정치부패 수사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 정치부패에 대해서는 외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정도에 그치고 있다.¹⁾ 여기서는 그 수준을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에바 졸리의 활약을 소개하고 이 수사관사가 거둔 프랑스 정치부패 수사성과를 정리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란 돈과 권력을 주무르는 엘리트계급이 저지르는 범죄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는 간헐적으로 고위 엘리트 계급이 저지른 커다란 부패사건들이 터지곤 했다. 부패혐의가 있었던 인물은 자크 시락, 알랭 쥐뻐, 롤랑 뒤마, 이들 모두의 대부격인 프랑소와 미테랑 전 대통령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한 학교 출신이며 공통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²⁾ 사회학자 피에르 라스쿰(Pierre Lascoumes)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재판을 받았지만 감옥형에까지 처해지진 않았으며, 부패혐의로 실제로 감옥에 갇힌 베나르 따뻐, 르와 르 플로쉬-쁘리장, 알프레드 지르방 등과 같은 인사들은 장관이나 회사임원이긴 했어도 배타적인 엘리트 특권계급에 속해 있진 않다. 그리고 부패를 밝혀내고 도려내기 위해 싸웠던 인사들도 통상 엘리트 계급 바깥에 있는 인사들이며, 에바 졸리 역시 프랑스 부패와 벌인 싸움에 있어서 전형적인 외부인사에 속해 있다.

이하에서는 에바 졸리의 약전을 소개하고, 에바 졸리의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프랑스 수사제도, 경찰의 정치부패수사, 언론과 수사팀의 관계, 프랑스의 부패망, 전후 적산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엘프사 사건이 주는 교훈, 에바 졸리 수사관사에게 가해진 사임압력, 프랑스 정치부패의 국제적 차원, 부패지속의 구조적 원인, 사법부의 역할, 2003년 에바 졸리가 주도한 빠리선언 등을 정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부패 수사와 관련하여 간략한 시사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아마도 우리에게 에바 졸리 주도의 빠리선언 정도가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반부패 시민운동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NGO나 시민단체의 반부패 운동에 위로를 삼아야 할 지 모른다.

2)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엘리트 육성에 대해서는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233-51를 참고하면 된다.

II. 에바 졸리 약전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정치부패수사의 주역으로 활동한 에바 졸리는 2001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유럽판에서 ‘올해의 유럽인’에 선정되었으며 2001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올해의 청렴인상을 수상하고 2002년 11월 SAS(스칸디나비아 항공) 기내잡지 ‘스카노라마’에서 ‘올해의 스칸디나비아인’으로 선정되는 등의 명성을 누렸다. 그럼 에바 졸리의 백그라운드는 어떤가? 무명에 불과했던 에바 졸리는 1981년 치러진 프랑스 법무부 주관의 특별 판사시험이라는 통과했다. 처음 검사보를 거쳐 1993년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 프랑스에서 이 분야 정원은 562명임)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수사판사는 매우 넓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검사이자 판사로서 원칙적으로 해임도 되지 않는 직책이다. 에바 졸리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에 전념하다 보니 ‘빠리 매치’라는 잡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뽑히기까지 했다.

에바 졸리는 원래 노르웨이 오슬로의 노동계급 출신으로서 본명은 그로 에바 파세스(Gro Eva Farseth)였다. 20세 때인 1964년 불어를 배우기 위해 오슬로에서 빠리로 건너왔으며, 졸리라는 집안에 입주하여 집안 일을 거들어주면서 공부하는 오페어(au pair)로 고학을 했다. 졸리 집안은 빠리 룩상부르 가든 지역 인근의 단독 주택가에 사는 프랑스 부르주아지계급 상류층에 속했다. 당시 에바는 주인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되자 에바를 고용한 졸리라는 의사는 에바와 아들의 결혼에 반대했다. 그래서 당시 에바의 남편은 가족으로부터 재산상속권을 박탈당했으며, 에바 졸리가 프랑스로 귀화한 나중에 가서조차도 가족들은 외국인인 에바 졸리가 프랑스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결혼에 성공한 에바는 의대를 다니던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한편, 다른 곳에서 비서로 취직했다. 에바는 노르웨이 악센트를 교정하기 위한 프랑스어 어학코스도 계속 다녔다. 그와 동시에 야간과정 법학코스도 다녔다. 이렇게 에바는 힘든 생활을 이겨냈다. 하지만 에바는 16세 때부터 이미 식당 서빙, 영화관에서 초콜렛 팔기 등 온갖 갖은 일을 다해본 덕분에 이런 일들도 곧잘 해냈다.

이렇게 에바는 직장 일, 공부, 가사 노동 등 1인 3역을 잘 조화시켜 갔으며, 빠리에서 딸을 낳고 남편이 개업한 시골 도시에서는 아들을 낳아 길렀다. 에바 졸리는 법학 학사를 받게 되자 병원 정신과에서 법무 카운슬러로 일했으며, 37세 때 마침내 법

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립사법관(수사판사)학교(the 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입학시험에도 합격했다. 이후 8년 동안 오를레앙과 빠리 교외 지역인 에브리 지역 수사판사로 봉직했다. 당시 에바는 매 맞는 아내, 학대당하는 어린이, 무장 강도, 사기, 강간, 살인 등 인생의 온갖 어두운 면들을 접한다. 1989년, 에바는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 재무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당시 소속기관은 ‘범부처산업부흥위원회’였다. 이 부서는 위기에 처한 산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했다. 여기서 에바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기업과 회계분야 세계를 탐사하게 된다. 임기는 1993년까지였으며 1993년 차장으로 승진한다. 이렇게 해서 에바는 수사판사로서 그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 된 셈이었으며 여성으로서도 최초였다. 물론 오페어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 오른 것 역시 최초였다. 에바는 50세가 되어 빠리 회계법원에 입성한다. 당시 수사판사 중 회계분야 사기죄 수사파트를 지원한 수사판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에바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당시 회계법원장은 나에게 ‘영구미제 사건으로 되어있다시피 한 이토록 엄청난 사건들, 난 뭐가 뭔지 전혀 이해 못해요. 당신이 이곳 회계분야 사기죄 수사파트를 택한 건 노르웨이인이며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이후 9년 동안 에바는 프랑스 언론들의 톱을 거듭 장식했으며, 가장 공포스러운 여성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정점은 1996년 에바가 기업인과 정치인 여러 명을 감옥에 가두도록 지시했을 때였다. 당시 프랑스 정치엘리트는 언제 에바에게 소환 당할 지 몰라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에바가 회계법원에 막 부임했을 당시 업무환경은 최악이었다. 어둡고 비좁은 방에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 낡은 전화기 한 대, 타자기 하나, 금속 캐비닛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서류 봉투 등이 전부로서 일할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 구둑가게만 해도 이보다 장비가 더 나을 것이라고 보았다. 에바는 딸이 쓰던 낡은 컴퓨터를 빌리며 자기 돈으로 팩스기를 사들이고, 전화 시스템을 고쳐 자기 일을 하면서도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손을 보았다. 상급자인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극도로 악조건인 사무실 업무환경을 TV 직원에게 비디오로 찍어두도록 했으며, 1년 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보여주면서 업무환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시 장관은 불쾌했지만 덕분에 에바는 ‘빠리 오페라좌’ 부근의 시설이 아주 좋은 사무실을 얻게 된다.

그러나 에바는 자신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동료들이 그다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전율했다. 에바는 2000년 낸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³⁾ “일에 흥미를 가진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빠리 법원장조차 나에게 자

신은 ‘어디에도 없는 이토록 엄청난 파일들을 전혀 알아볼 수조차 없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소’라고 말했다”라고 썼다. 에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에바는 엄청난 서류더미를 정밀 탐색했으며 이내 공적 자금이 조직으로 빼돌려진 것을 밝혀낸다. “당초 나는 부패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몰랐다. 사람들이 모두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픽션을 훨씬 뛰어넘었다. 부패는 고질병과도 같았다. 고위직의 사기범죄는 거대한 대양과도 같다. 나는 매일같이 새로운 범죄를 밝혀냈다.” 에바가 빠리 법원에 오기 전까지 법원 판결까지 받아낸 굵직한 회계범죄 수사는 거의 없었다. 에바는 아직도 회계 부패범죄의 95%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언론은 에바를 극찬했으며 국민들은 에바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불과 네댓 명의 젊고 열정적인 수사관사들이 구시대 부패인사들을 숙청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프랑스 최대이자 가장 복잡했던 국영 석유회사 엘프사 부패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정부승인 아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몇몇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했음을 밝혀낸 것을 계기로 여론은 심술궂게도 에바의 수사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쪽으로 돌변했다. 이런 부패 관행은 과거 좌파 정부는 물론 우파정부도 오랫동안 젖어온 관행이었다. 하지만 에바는 확고한 증거들 상당 부분을 확보했으며, 마침내 1992년 프랑스의 엘프사가 구동독 로이나 정유회사 구입 및 건설과정에서 제공한 뇌물 중 상당액이 독일 기민당 콜 총리에게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를 밝혀낸다. 당시 독일총선 여론조사에서 콜 총리가 낙선할 지도 모른다고 본 미테랑이 엘프사에게 1천 5백만 달러를 콜 총리 선거자금으로 제공토록 지시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 범죄혐의는 프랑스 정부측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에바의 수사내용을 국가기밀로 분류하여 대외비로 하도록 지시했다.

어쨌든 1998년 1월 에바는 프랑스 국가서열 제5위에 속하는 헌법재판소 원장인 롤랑 뒤마를 체포한다. 이때 프랑스 국민들은 짜릿한 감동을 맛보면서도 다른 한편 이를 매우 거북해 했다. 75세인 프랑스 최고 법조인사가 한 외국 여성에게 그토록 수치스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은 에바에 대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에바와 동료들은 연줄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여 프랑스 국민정서와 언론마저 움직이고 있는 인사들을 비난했다. 과거 에바의 시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프랑스 언론도 에바의 외모 등을 비난하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에바의 사진으로 18시간씩 일하느라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중년 모습의 사진으로 바꾸었다. 요컨대 프랑스 언론은 에바 줄리가 “전직 오페어”였으며 “바이킹의 후손”이고 “프로테스

3) 자서전 이름은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Notre Affaire a Tous)이다.

탄트”라고 떠들어댔다. 프랑스 언론은 에바의 어투와 악센트를 흉내내기도 했다. 에바의 수사대상이 된 한 은행가는 ‘체대로 된 프랑스어’로 신문하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다고 거부하기까지 했다.

프랑스 언론은 롤랑 뒤마가 대만 측에 대해 프랑스계 프리깃트 함을 판매할 때 불법 커미션을 준데 따른 진짜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에바가 뒤마의 구두나 애인에 집착한다고 매도했다. 하지만 에바는 프리깃트 함이란 게 기실 국가기밀이라고 덮어버리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2001년 1월 뒤마는 국가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정에 세워졌으며, 유죄가 확정되었다. 뒤마의 이 유죄 확정은 에바의 판단이 정당함을 입증했으며, 이에 프랑스 국민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뒤마 자신은 애인이 자신에게 쏟아부은 선물공세가 엘프사가 제공한 뇌물임을 전혀 몰랐노라고 주장했으며, 그러면서도 항소는 포기했고, 그러나 이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한 프랑스 법조인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에바는 상당수 명사들을 피고석에 세우는데 성공은 했다. 하지만 이중 프랑스 엘리트계급 핵심에 속하는 인사들은 아무도 없었다. 2002년 1월 뒤마가 석방되자, 에바는 다른 90건에 달하는 사건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으로 인해 2002년 3월 사표를 제출해야 했으며 노르웨이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Ⅲ. 프랑스 수사제도와 경찰의 수사

프랑스 수사관사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인사들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게끔 제도화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어떤 범죄도 기소담당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소담당자가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수사관사를 지명한다. 프랑스 기소담당자나 수사관사는 영국의 치안판사(영국의 치안판사는 무보수 평화판사로서 사법작용의 최초 시점에서 법 적용과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와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⁴⁾ 물론 우리나라 검사나 판사제도와도 전혀 일치되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프랑스 수사관사는 법 분야의 전문적 훈련을 거친 ‘형사 즉 수사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

4) 영국의 형사소송구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I), 2004의 소개글을 참고할 수 있다.

사하며, 사법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때 현직 대통령 소환만은 예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판사는 재판 없이 용의자를 여러 달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⁵⁾

1990년대 후반 수사판사에 의해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서 대기해야 했던 엘리트계급 인사들이 감옥의 실태와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여론이 수사판사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프랑스 헌법상 수사판사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수사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소담당자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즉 기소담당자는 법무부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만 직책을 유지하거나 승진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기소담당자가 특정사건에 대해 법무부 측이 기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느끼게 되면, 사건을 둘 이상의 사건으로 쪼개어 각각의 사건을 별도의 수사판사들에게 배당하여 각기 국가의 전혀 다른 부문에서 수사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정작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결코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기소담당자는 수사를 개시토록 할 때 지침을 내리며 수사판사는 이 지침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만일 수사판사가 1만 유로에 해당하는 허위 송장(送狀)에 대해 수사하는 도중 다른 허위 송장을 발견하는 경우 기소담당자로부터 추가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를 수사하거나 증거물로 압수하거나 용의자를 신문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기소담당자에 대해 수사판사가 수사개시 요청을 하면 이는 법무부장관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통례이다. 이때 법무부장관은 핑계를 붙여 몇 주일씩 틀어쥐며 그후 그냥 기각해버릴 수 있다. 왜 기각결정을 내렸는가 해명하는 경우란 아예 없다. 한편 이렇게 법무부에서 심사하는 동안 용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며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심지어는 국외로 도피시키기도 한다. 에바 줄리는 수색에 나설 때 휴대용 팩스기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런 일을 피했다. 에바가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면 기소담당자에게 수사개시 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세 부사항을 팩스로 보냈으며, 이렇게 하면 그 증거가 기록에 남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수사판사가 기소담당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수사판사의 수사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뜻한다.

5) 프랑스의 수사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다음의 연구성고가 나와 있다.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II), 2004.

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법적 모색, 법문사, 2004.

법무부, 프랑스의 사법제도, 1997.

프랑스의 우익 정치인 및 사법부 고위인사 상당수는 이 수사관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한다. 에바 졸리는 2001년 올해의 유럽인상 수상 소감에서 “상당수 정치인, 언론인, 사법관 등은 국민들에게 프랑스를 위협하는 것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아닌, 이런 부패를 수사하는 판사들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부패란 민주주의, 자유, 평등, 특히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위협입니다.”⁶⁾

1971년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당을 창당할 당시엔 정당정치자금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전혀 없었다. 당시 사회당은 병원, 경찰서, 시(구)청, 학교 등 프랑스 전반을 현대화하며 재건축하는 일에 매진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에 사회당은 울바(Urba)라는 건축과 건설 컨설턴트 기관을 설립했다. 울바는 부지선정에 대한 자문, 건축가 섭외 및 모든 공사감독 등을 심사하는 일을 도맡았다. 울바는 그 대가로 전체 공사비의 3%를 챙겼다. 그리고 이 자금은 울바 운영비 40%, 사회당 30%, 공사계약을 따준 선출직 지방의원 30% 등의 비율로 배분했다. 즉 울바는 정당금고 및 개인 호주머니 속으로 공적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썩 잘 운영되었으며, 정당 쪽 요구가 커지고 선출직 지방의원의 욕심이 커지면서 급속하게 팽창한다. 즉 프랑스 전역에 16개의 울바 지방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덧붙여 다양한 소규모 회사 및 위장회사들이 만들어져 세금 징수원 및 경찰로부터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마침내 울바가 설립된 지 10년 만에 미테랑은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좌파는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수천 개소의 타운지역에서 사회당 소속 시장들이 당선되었다.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울바의 상당수 불법행위들이 진작부터 수사당국의 용의선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여 일부나마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일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법무부 측에 의해 저지 당하고 말았다.⁷⁾ 1987년 울바는 연간 1억 2천 3백만 파운드 거둬들였다. 하지만 다음해 미테랑이 대통령에 재선되었을 때는 이미 미테랑을 포함하여 사회당 소속의 선출직 의원들 비리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당 승리를 경축하는 일환으로 이들에 대해 사면조치를 내린다. 그래서 부패한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수사해 오던 수사관사 및 경찰관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다. 결국 이것은 프랑스 수사관사들이 오랫동안 회계비리 사건에 대해 왜 열의가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한

6) *Independent*, 26 Jan 2002.

7) Tim King, *French Favours*, *Prospect* Jan 2004, pp. 24-31.

요인이기도 했다.

사실 지금까지 올바에 대해 알려지게 된 사실들은 당초 불과 몇몇 경찰관들이 밝혀낸 것이 전부이며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즉 1986년부터 앙뜨와느 고디노와 알랭 매요라는 두 경찰관은 ‘중앙건설컨소시엄’ 측으로부터 과도한 공사대금을 받은 1인으로 이루어진 건축회사를 수사했다. 당시 사건에서 모두 1천 5백만 프랑에 달하는 수표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3년 동안에 걸친 수사는 여러 모로 막다른 골목에서 막히곤 했다. 이 두 경찰관이 신문한 인사들은 인출된 현금이 어디로 갔는가를 밝히기보다는 차라리 감옥행을 각오한 고위직 경영인들이었기 때문이다.

1989년 4월, 두 경찰관은 마르세이유에 있는 올바 지방 사무소를 짧은 시간 동안이나 수사한 적이 있으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디노는 수색과정에서 어느 한 서랍에서 4권의 학생용 노트를 찾아냈는데, 여기에는 올바의 내부회의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이 노트 발견에 대해 고디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는 마침내 올바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펜으로 써 내려간 기록을 접하게 되었다. 이 노트를 통해 사회당이 전국 차원에서 뇌물과 부패 시스템을 조직화하여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설립한 막후 사무소였음이 밝혀졌다. 사기꾼들의 ‘공부 및 연구활동’을 조정할 대가로 올바 측에게 지급된 ‘커미션’이란 기실 건축회사 측이 공공부문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뇌물, 바로 그것이었다.” 이 노트의 한 대목은 1989년 1월 사회당 빠리 중앙당 당사에서 올바 소속의 한 직원이 마르세이유 지하 터널건설 공사계약을 따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 조건은 5백 7십만 프랑의 뇌물을 올바 측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보름 후 마르세이유 시의회 측은 그를 곧바로 이 터널공사 건설업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 노트는 고디노가 이 건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고디노가 올바 사무소에서 이 노트들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사 개시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총리실에서는 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지시에 대해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고디노는 최초로 이와 관련된 모두 84상자에 이르는 증거들을 신중하면서도 철두철미 조사했다. 고디노가 찾아낸 증거에 따르면 1988년 올바 측은 2천 4백만 프랑을 미테랑의 선거운동팀 금고에 제공했다. 사회당 측은 몇 달 후인 사후에 가서야 비로소 이런 식의 기부금 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을 발의하여 통과시킨다. 고디노는 이 증거를 24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기소담당자에게 제출했으며, 기소담당자는 이

를 곧장 빠리로 보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이 침묵만 흘렸다.

그후 진술서 사본이 까나르 앙웨느 신문에 흘러갔으며 결국 울바 문제는 1면 톱뉴스가 되었다. 마침내 1990년 미테랑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러나 이번에도 사면조치를 내리고 만다.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 조달을 포함한 정당 재정과 관련된 모든 잘못들이 과거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없었던 일로 사면되고 만 것이다. 고디노는 즉각 이 수사에 대해 『불가능한 수사』(L'Enquete Impossible)라는 책을 썼다. 고디노가 밝힌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워낙 자세히 되어 있어서 정부측은 일련의 수사를 개시토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수사가 개시되어 여러 기업인과 대도시 시장들이 감옥형에 처해졌다. 그 사이 고디노는 경찰에서 파면 당해야 했다. 그는 직장을 잃었지만 프랑스 집권당의 불법자금 뿌경을 들어내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것은 프랑스 엘리트계급과 사법부 사이에 벌어진 싸움의 단초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IV. 프랑스의 부패구조

프랑스 국민들은 부패가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지방과 지역 수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잘 안다. 예컨대 슈퍼마켓의 각 코너 제품들 모두가 5%씩 커미션을 주어야 하며 온갖 건설계약도 봉투를 건네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캐피탈’ 잡지에는 “계약을 따려고 봉투를 준 적은 단 한번도 없어요. 하지만 무료수영장을 지으려면 봉투 12개 정도는 당연히 갖다주지요”라는 건설업자의 지적이 실렸다. 화장실을 짓는데 해당 지방공무원에게, 집 짓는데 해당 도시 시장에게 봉투를 갖다 주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벌어진다. 하지만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36,777명이나 되며, 이들은 모두 권력은 있지만 훈련은 안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고전적인 시나리오는 재선을 위해 돈이 필요한 조그마한 도시 시장의 경우, 시장은 지역 건설업자에게 가상의 건축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건설업자는 시장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시장은 이 돈을 시금고에서 꺼내 선거운동에 쓰며, 건설업자는 시장이 당선된 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⁸⁾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횡령이나 뇌물수수료 유죄판결은 받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진 않는다. 예컨대 사회당 정치자금 사건으로 재정위원장인 앙리 에마뉴엘

8) Tim King, 같은 곳.

리는 감옥형에 처해진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석방되어 재선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뇌물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름칠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부패척결에 앞장서는 수사관사들은 프랑스 기업계 이익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는다. 나아가 이 수사관사들이야말로 결국 민족전선당(the National Front) 측의 팽창에 일조한다는 비난까지 받는다. 즉 르팡이 이끄는 민족전선당 측은 “진짜 프랑스”의 깨끗함은 겨우 합격점을 받는 정도이며 다른 많은 정당들이 부패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접한 유권자들이 환멸감을 느끼면서 곧이곧대로 민족전선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사실 부패는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그럼 프랑스에서 부패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작가인 에드몽드 샤를르 루(Edmonde Charles Roux)에 따르면 “지중해 인근에 사는 민족은 독특한 정직함의 개념을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와 영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의 양측면이 혼재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돈에 대한 태도이다. 영국인은 돈은 한낱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좋은 돈이 있는가 하면 탐욕, 불성실, 정직하지 않게 번 나쁜 돈이 있다. 반면 프랑스인의 태도는 돈이란 죄로 물들어있다는 카톨릭 입장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다. 따라서 부패란 단지 이미 죄로 물들어있는 것을 단지 한번 더 욕보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 된 이 카톨릭적인 입장은 다시 모든 카톨릭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공화주의 입장에게 짓눌려 있다. 공화주의 입장은 부분적으로 카톨릭 교회 그 자체도 부패해 있다고 본다. 공화주의 논리에 따르면 ‘윤리’라는 말은 교회라는 냄새를 풍기며 따라서 정치인을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를 교회와 혼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법은 이렇게 혼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 이념은 무엇이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돈에 대해 의혹과 과묵함으로 가지고 보는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영국과 프랑스의 근본적 차이점은 프랑스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태도에 있다. 프랑스에서 정치란 힘이며 외형의 예술(l'art de paraître)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정치지도자가 공동선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도 비난하지 않는다. 전직 장관 베나르 따삐는 재판에서 자신이 위증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무기밀매 사건에서 프랑소와 미테랑의 아들 변호를 담당한 장-뵘에르 베르시니 깡뻘치 변호사는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선의와 정직함에서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프랑스인들은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에바 졸리의 정치부패 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의 태도는 한때 우호적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프랑스 언론의 한계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컸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점령”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최근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패’라는 단어가 생활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해 있긴 하다. 프랑스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의 핵심은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법의 잣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구가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프랑스 언론은 선출된 국가지도자에 대해 훨씬 더 큰 충성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언론보다 자유스럽지 못하다. 프랑스 언론은 정부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⁹⁾ 그래서 1980년대 중엽까지 프랑스에서는 언론과 선출된 정치인 사이 및 언론 소유주와 정부측 사이에 묵시적인 공범 및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몇몇 언론인들이 주저하면서나마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시작했다. 1983년 피에르 피안(Pierre Pean)은 빠리와 서부 아프리카 국가간의 건강하지 못한 위험한 관계에 대해 기사를 썼으며, 1985년 프랑스 정보당국이 그린피스호를 폭파한 사건에 대해 언론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다. 젊은 기자들은 미테랑 대통령 및 그의 집안과 특히 정당성이 결여된 정당을 멀리하고 경원시해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다. 이후 수사관사와 언론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반부패 운동의 원동력은 양자간의 바로 그와 같은 이상주의에 있었다. 부패 이야기를 게재한 신문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으며, 이로 인해 수사관사들 명성은 치솟았다.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상당수 수사관사들은 열정과 정치적 적대감만으로도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반면, 상당수 언론인들은 법제도로 인해 사법처리가 지체되는 사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심리 중이어서 보도 통제 중이던 사실에 구애받지 않은 채 스타급 수사관사의 다음 조치들을 예상하면서 소설쓰기식 보도가 성행했다. 이렇게 각종 부패수사는 언론에서 각광받게 되자, 수사관사들은 점점 더 비협조적이 되어 갔으며 몇몇 언론인들은 이를 두고 수사관사들에 대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 언론은 수사관사가 저지른 실책을 보도하거나 방어담당 변호사에게 특수정보를 넘겨주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결국 에바 졸리는 언론 측이 동원한 전술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에바가 롤랑 뒤마

9) 김문환, 프랑스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p. 40-42.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뒤마는 결정적인 심문을 받기 하루 전날 르 피가로 지와 장시간 인터뷰를 갖고 사건의 진행 경로에 대해 나름대로 미리 확정해버렸다. 이와 함께 라가르데르, 무기업체인 다소, 건설업체인 부이규 등과 같은 거대 산업자본 측이 르 피가로, 텍스프레스, TF1, 빠리 매치 등과 같은 언론사들을 사들였다. 고디노는 “이미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상당수 기업들은 자기 돈을 동원하여 언론을 사들였다. 어느 편집장도 해당 언론사의 대주주를 중상하거나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각종 기사를 통해 언론은 피해자가 되고 만 가련한 기업인들을 변호하며, 수사판사에 대해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공격했다. 물론 언론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건을 깊이 있게 파헤친 기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론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조차도 수사판사가 알려주는 그대로 보도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별도로 독자적인 심층추적이나 탐사보도를 통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봉급쟁이 언론인이 할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프리랜서로서 심층추적 보도를 하면 소송을 당하기 일쑤이다.¹⁰⁾

V. 전후 적산처리와 엘프사 사건

현재 프랑스의 엄청난 부패 흐름이 생긴 것은 1970년대 울바가 만들어지고 오일 쇼크 때부터라는 시각이 있다. 유가 인상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이라크, 앙골라, 가봉 등에 대해 무기와 핵무기 부품 판매에 나섰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부패는 폴베르 재상이나 그 이전으로 소급되기도 한다.¹¹⁾ 프랑스 제3공화국은 뇌물의 만연으로 악명 높았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 부패 씨앗의 상당 부분 미테랑 대통령에 속해 있는 세대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뿌려졌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¹²⁾

10) 예컨대 데니스 로베르(Denis Robert)가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어음교환소인 ‘클리어스트림사(Clearstream) 측에 대해 『달러의 폭로』(*Revelation*)라는 책을 냈을 때 20건에 이르는 명예훼손죄 소송을 당해야 했으며, 고디노의 두 번째 책인 『기업법원 마피아』(*The Mafia of Business Tribunals*)에 대해서는 43건이나 되는 명예훼손죄 소송을 당했다. Tim King, 같은 곳.

11) Robert Neild, *Public Corruption*, London: Anthem Press, 2002, pp. 33-44.

12) Tim King, 같은 곳.

제2차 세계대전 초기 23세이던 향후 대통령이 된 미테랑은 확고한 카톨릭 우익에 속해 있었다. 이때 적어도 두 명의 그의 친구가 프랑스 파시스트 국가 건설을 꾀하던 비밀결사인 카굴(the Cagoule) 회원이었다. 1940년 당시 군인이던 미테랑은 독일군에게 전쟁포로로 생포되었다가 18개월만에 도망쳐 나와 당시 비시정부 공무원이 되었다. 미테랑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대부분 친(親)페탕파이자 열렬한 반(反)드골파에 속해 있었다. 1943년 초 미테랑은 페탕 장군으로부터 충성 메달을 받았다(물론 미테랑 자신은 일생 동안 이 메달 수여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943년 후반 미테랑은 런던과 알지예를 방문하며, 이때 어느 편이 유리하게 되어 가는가를 판단하게 된 그는 비시정권에서 드골파로 변신한다.

1944년 여름,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진격해오자 프랑스는 내전에 휩싸인다. 프랑스인 수천 명이 동포들 손에 죽어갔다. 재산도 “레지스탕스의 이름으로” 몰수당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부유함이란 곧 독일군에 대한 부역행위와 통했으므로 개인 재산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용감무쌍한 자들에게 약탈당했다. 당시 미테랑도 빠리 오페라 극장 인근의 한 사무소 빌딩을 갖고 싶어했다. 이 건물은 독일군 병참부가 점령하고 있었으며, 관리자는 모로라는 프랑스인이었다. 빠리가 공식 해방되기 5일 전인 8월 20일 오전 11시, 미테랑은 세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 건물 사무실 본부로 쳐들어가 모로의 가슴에 리벌버 총을 들이댄다. 모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미테랑은 “당신 당장 꺼져”라고 외쳤다. 모로는 미테랑에게 자신은 소유자 아닌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으며, 그러자 미테랑은 “선생, 논쟁은 필요 없어. 이건 혁명이란 말이오”라고 응수했다. 정오 무렵 미테랑은 로비에 자신의 무장 경비원을 박아둔 채 자전거를 타고 친구인 장 부비에의 어머니 집에 점심을 먹으러갔다. 장 부비에는 미테랑이 같이 어울려 활동하던 파시스트 카굴 모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독일을 위해 일하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미테랑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선문 인근 떨짓 가의 이 “매우 빼어난 건물”을 징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기민함, 파렴치함, 폭력 등만 갖추면 족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인사들이 이 공포의 몇 달 동안 엄청난 재산을 쌓았으며, 전쟁 이후 갖게 된 다른 많은 못된 습관이나 버릇도 이때 생겨났다.¹³⁾

미테랑의 레지스탕스 시절 동지이자 과거 르노자동차회사 노동자이던 금융업자 로저 패트리스-펠라(Roger Patrice-Pelat)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즉 1982년 미테랑 대통령은 ‘종합전력회사’측에게 펠라가 소유한 회사를 매입하도록 지시한다. 당시 이

13) Tim King, 같은 곳.

회사 가치는 6천만 내지 6천 5백만 프랑이었으나, 이 국영 전력회사는 1억 1천만 프랑을 지불했으며, 5천만 프랑 이상에 달하는 차액은 나중에 룩셈부르크의 한 계좌로 흘러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1990년 중반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프랑스의 128명의 장관 중 34명이 대부분은 회계범죄 즉 정치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시락 대통령은 파리시장 재직 시절 시장직을 활용하여 자신과 소속정당 및 지지자들을 치부하게 만든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내세워 겨우겨우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¹⁴⁾ 서구 국가 지도자들 중 시락 프랑스 대통령은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대통령 다음으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시락 대통령 측근들은 에바 졸리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왜곡시키는 허영심 많은 늙은 과부로 매도하고 회화화했다. 2003년 법원측은 법무부 압력으로 에바 졸리의 저서가 출판되기 전날 밤 출판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¹⁵⁾

당초 엘프사 사건은 수사관사들 중 누구도 감히 손대기가 위험천만하다고 본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드골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와 대결하기 위해 그들을 훔내내어 만든 회사였기 때문이다. 회사 창설자는 레지스망스 시절 드골의 비밀정보국장이던 뻬에르 기욤으로서 그는 나중에 국방장관 및 프랑스 원자력 프로그램의 입안자로 기용되었다. 기욤은 이 회사가 부침을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회사임원과 프랑스 정보국 정보원을 겸하는 인사들을 임명했다. 엘프사는 프랑스 정부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비밀정보업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모두 엘프사의 ‘검은 상자’를 통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비밀 계좌는 공적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정유회사 및 프랑스 정부측이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외국 정부 지도자 특히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을 매수하는데 활용했다.¹⁶⁾

미테랑 대통령 시대 들어서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마침내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아갔다. 검은 상자를 통해 운용되는 비밀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각정당들은 국영회사인 엘프사가 엄청난 비밀자금의 출처이며, 그 중에서도 시락이 소속한

14) 프랑스 헌법과 권력관계 및 대통령 일반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마리-안느 꼬앙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과 동거정부, 이창훈편,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아셈연구원·한국프랑스정치학회, 2004, pp. 61-98.

15) 에바 졸리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Eva Joly (with Laurent Beccaria), *Notre affaire a tous*, Les Arenes, 2000과 『이것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세상인가?』 Eva Joly (with Laurent Beccaria), *Est-ce dans ce monde-la que nous voulons vivre?*, Les Arenes, 2003 등 모두 두 권의 저서를 낸 바 있다.

16) Philip Delves Broughton, Elf Warning, *Spectator*, 25 Jul 2003.

RPR 당이 최고 수혜자임을 알게 된다. 엘프사 임원들은 자기 잇속을 위해 돈을 가져갔으며, 커미션을 부풀려 받아 그중 일부를 중개자에게 리베이트로 주기도 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중개자는 어류가공업 부호인 자르딘(Dede la Sardine)이었다. 엘프사 CEO 임명 승인권을 쥐고 있는 미테랑 대통령도 부패행위를 저지르는데 스스로 없었으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다. 예컨대 미테랑 대통령의 정기골프 파트너는 미테랑이 즐기던 골프코스 인근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미테랑 대통령은 엘프사가 이 집을 사들인 다음 엘프사의 위탁 시설로 삼도록 요구했다. 결국 이 미테랑 대통령 친구는 계속 그 집에 살면서도 집세를 전혀 내지 않았으며, 모든 비용은 엘프사가 부담했다.¹⁷⁾

2003년도 두 개의 커다란 부패사건 재판이 열렸다. 하나는 엘프사 건이며, 다른 하나는 드골주의 RPR 당 사건이었다. 엘프사 사건은 세계 최대규모의 공적자금 절도 사건으로서, 엘프사 측에 따르면 4억 유로가 그냥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총 37명 중 세 명의 정범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재판장은 각자에 대해 상대방 증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마치 서로 비난하기를 바라마지않는 것처럼 비쳐졌다. 당연하게도 세 명의 증언은 서로 달랐으며 언쟁을 벌이고 상대방에 대해 공개적인 분노를 표시했다. 재판장의 계산된 연막전술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은 4억 유로라는 엄청난 액수에 대해 이리저리 갈팡질팡 논란만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돈으로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았는가라는 문제의 핵심은 파묻혀 버리고 말았으며, 재판장조차 혼란스럽다고 시인한다. 예컨대 4천 2백만 프랑의 공적 자금이 인도양 상의 카르티에 섬에서 탕진되었으며 2백만 프랑은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킨 어느 한 걸프만 왕국의 한 부인을 위해” 목걸이를 사주는데 썼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럼 과연 그 부인은 누구이며 그 걸프만 왕국이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그리고 성사시켰다는 그 거래란 무슨 거래를 일컫는가? 피고 중 하나인 알프레드 지르방은 “프랑스 그 자체를 날려버릴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재판은 지르방 등이 과연 도화선에 불을 붙일지 지켜보는 사람들 의지간의 싸움으로 비화되었다.

엘프사의 전직 CEO인 르 플로쉬-쁘리장 역시 금방 정보를 폭로할 것 같은 모습을 몇 차례 연출했다. 당시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린 당사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줬어요”라고 말했다. 마침내 뿌리장은 압력에 굴복한 듯 “대선 후보들 모두

17) 같은 곳.

봉투를 요구했소”라고 시인했다. 그럼 대선 후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공범이나 관련자 이름을 모두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엘프사 CEO의 임기 동안 대선이 치러진 것도 아니었다. 다른 추가질문은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돈의 용도에 대해 아무도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 이 자금에서 덕을 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뿌리장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8년에 걸친 에바 졸리의 엘프사 사건 수사는 2003년 엘프사 전 CEO인 르와 르 플로슈-쁘리장, 그의 선임 임원인 앙드레 따랄로 및 알프레드 지르방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정점을 맞는다. 이들은 엘프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집과 예술품을 사들인 혐의가 인정되었다. 르 플로슈-쁘리장의 경우 이혼하고자 했는데, 미테랑 대통령은 그에게 이혼 합의금을 엘프사에서 받아가도록 허락했다. 한편 시락은 엘프사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충복인 꼬레즈 에일 맥주공장을 사들이도록 했다. 그리고 ‘프랑스 은행’의 장-클로드 뜨리세 행장은 분식회계 혐의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어 ‘유럽중앙은행’ 부행장으로 내정 받았다. 이 엄청난 공적자금 절도사건에서 관련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 프랑스 럭비팀이 호주에서 패했다는 뉴스보다 더 비중이 낮게 다뤄질 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감옥형 외에도 총 1천 8백만 유로의 벌금 및 엘프사에게 1억 8천만 유로를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부패하게 취득한 프랑스내 재산은 이미 압류되었다. 그러나 돈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 하나 댈 수 없다. 그리고 법원 선고가 이 절도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인 정치인들에 대해 손 하나 대지 못할 것 인가는 분명치 않다. 뒤마가 외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초반 대만 측에게 프리깃트함 판매를 보증하기 위해 엘프사가 제공한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더더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VI. 에바 졸리에 대한 사임 압력

에바 졸리는 엘프사 수사과정에서 신체적으로 협박당하며 전화는 도청 당하고 집과 사무실이 침입 당했다. 무엇보다도 장관들이 자신의 수사를 돕기보다 방해한 점이 야말로 분노를 금치 못하게 했다. 에바 졸리 책상 위에 에바 졸리의 이름만 빠진 채

살해당하고도 사건이 미스터리로 빠져있는 여러 명의 전직 수사관사 명단이 적힌 쪽지가 놓여지기도 했다. 에바 졸리가 RPR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고위 경찰을 방문했을 때 현관문 탁자에 장전된 리벌버 권총 한 자루가 놓여져 있었다. 보호와 경비를 요청하자 보디가드를 대동하면서 체제한다는 조롱을 받아야 했다. 장관 쪽의 위협도 계속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엘프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에바 졸리의 책이 나오는데 대해 ‘분노’를 표시했으며, 의회 의장 장-루이 데브레는 책이 ‘매우 쇼킹하다’며 에바 졸리가 명성을 탐한다고 비난했다.¹⁸⁾ 두 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에바 졸리가 기소한 기업인들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랑스에서 에바 졸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실히 입증한다.

에바 졸리는 노골적인 사임압력을 받다가 2002년 3월 마침내 사임하고 노르웨이로 돌아간다. 이에 앞서 에릭 할펜 수사관사 역시 시락 대통령의 빠리 시장 시절 리베이트 수수사건을 수사한 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으로 인해 위축당하게 된 이후인 2002년 1월 사표를 내고 만다. 에바 졸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엘프사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대규모 무기 회사, 항공회사, 정유회사 등에도 만연되어 있으며, 이는 제3세계를 대변한다는 프랑스 주장을 비웃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엘프사 사건이나 다른 중대한 부패사건들에서 진짜 교훈은 예컨대 3명이 회사를 횡령한데 있지 않다면서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한다.¹⁹⁾

1990년대 당시 프랑스 정치부패 사건을 달구었던 열정들은 이제 모두 식어버렸으며,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사들은 오히려 정치인 및 언론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이들은 부패수사가 자신들을 지치게 만들었으며 정직하다는 명성을 쌓아온 프랑스를 망쳤다고 비난해 마지않는다. 에바 졸리는 정치인들이 엘프사의 자금을 어느 정도 빼돌렸는가는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흔적을 밝혀내기에는 이미 증거들이 인멸되어 버렸거나 수사팀에 대한 자금지원이 고갈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정당이 뇌물을 챙길 기회를 노렸다는 점에서 이 수사가 어떤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정치인은 전무하다. ‘프랑스를 포함하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부패에 대해 훨씬 더 용서를 잘해요. 프랑스 국민들 태도는 선거에서 부패 혐의자를 다시 당선시키고 맙니다.’²⁰⁾

18) 프랑스에서 출판이 금지 당하던 책들 중에는 1950년대 프랑스 군인들이 알제리아인들을 고문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든지, 미테랑 대통령 주치의가 암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대통령 건강이 양호하다는 허위 의료검진 기록에 서명을 강요당했다고 쓴 책들도 있긴 하다.

19) 같은 곳.

2003년 프랑스 국민들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재판은 전직 총리이자 현직 대통령인 알랭 쥐삐가 연루된 사건이다. 쥐삐가 부총재인 자크 시락의 RPR당 직원들에게 공적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유용한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이 재판의 초점은 과연 누가 이 유용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묵인 내지는 공모했는가를 확정하는데 있었다. 허위로 밝혀진 직책들 상당수는 빠리 시청에 있었으며, 당시 빠리 시청(당시 시장은 시락)에서 재무관은 쥐삐였다. 많은 증인들이 그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쥐삐는 냉정하게 자신은 아무 것도 몰랐다고 주장해 마지않았다.

2004년 1월 30일 프랑스 재판부는 현재 중도우익 정당인 UMP 당수이자 보르도 시장을 맡고 있는 쥐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다. 즉 빠리 인근 낭떼르 법원의 한 판사는 쥐삐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10년 동안 공직보유 금지, 5년 투표권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다. 공직보유금지 판결로 인해 쥐삐는 2007년 대선 출마의 꿈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당초 기소 담당자는 8개월 자격정지만을 구형했으며, 공직보유 금지 조치는 아예 구형조차 하지 않았었다. 이것은 프랑스 사법부가 엘리트계급의 부패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 웅변적으로나마 많은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사회당 측의 반부패 투사인 아르노 몽트부르(Arnaud Montebourg)는 “불법적으로 공적 자금 2천 5백만 프랑을 유용한 쥐삐보다 자동차 과속위반자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VII. 프랑스 정치부패의 국제적 차원

엘프사의 아프리카 활동은 이미 1950년대 드골 대통령 및 보좌관인 고 자끄 포카

- 20) 같은 곳. 그리고 이탈리아 경우에도 TI 서베이 조사결과 공공 건설 수주 낙찰가격이 ‘깨끗한 손’의 수사 이후 45%나 떨어졌음을 밝혀냈으며 한때는 국민들 환호를 받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역풍은 매우 강했다. 즉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이탈리아 의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는 판사 매수죄이고, 이탈리아에서 새로 통과된 법안은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 기소된 죄목인 허위회계 범죄에 대해 이를 비형사범죄로 전환하고 최고 형량도 7년 6개월로 절반 줄이도록 했으며, 부패 혐의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 두 가지 모두 기묘하기 짝이 없는 형량제한 입법으로 인해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들이 모두 파기되고 말았다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7 March 2002).

르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엘프사를 서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의 오일 달러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당초 엘프사는 드골 장군이 설립한 회사로서 1994년 민영화되어 토탈피나엘프사(TotalFinaElf)로 합병되었다. 이 회사는 통상 프랑스 정부의 비밀자금이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나 남미에서 돈세탁하는 외피로 활동해왔다. 이때 엘프사가 동원한 시스템은 커미션을 분산하여 프랑스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며 나중에 가서는 드골주의 정치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²¹⁾

이 활동은 과거 두 차례나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75세의 샤를르 파스꾸아가 주도했다. 당시 파스꾸아 장관은 엘프사 소유 비행기를 70회 이상 이용했다. 이 여행은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같은 무료 여행은 앙드레 구엘피라는 엘프사 고문이 주도했다. 구엘피는 세계 구석구석과 커넥션을 맺고 있었으며 대체로 이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개역 자격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엘프 항공’으로 불렸다.²²⁾ 엘프사의 CEO를 역임한 르와 르 플로슈-쁘리장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이혼 합의금으로 주었으며, 이는 당시 미테랑 대통령 허락을 받았다. 플로슈-쁘리장은 2001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1년 5월 외무부장관을 역임한 톨랑 뒤마는 1989-1992년 엘프사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6개월형을 살아야 했다. 이 사건의 파급효과는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스페인 대법원은 2001년 전 외무부 장관 조셉 빠끄를 회계부정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것은 스페인의 에르티올사(Ertiol)를 엘프사에 팔아 넘긴 사건이다. 빠끄 장관은 에르티올사의 고위 임원이었다. 스페인 대법원 측은 자금횡령, 조세포탈, 사기 등의 혐의로 10대 2로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엘프사에서 판매 대금으로 받은 2억 6백만 달러가 룩셈부르크의 한 지주회사로 흘러갔으며 수사팀은 이중 절반은 행방을 추적할 수 없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아우치는 자신의 무기회사인 ‘지중해종합부동산’(GMH) 측이 에르티올사를 인수하면서 저지른 횡령과 사기 공모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기소되었으며, 그후 1990년 12월에서 1994년 8월까지 엘프사에게 팔아 넘긴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되었다”고 밝혔다.²³⁾

아우치는 이라크에서 출생한 영국인 기업인으로서 그는 2003년에야 비로소 영국에서 프랑스로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졌다. 거의 2년에 걸쳐 프랑스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

21) Keith Lee, “Total oil in France’s biggest postwar financial scandal,” World Socialist Web Site, www.wsws.org, 11 July 2003.

22) 같은 곳.

23) 같은 곳.

도를 요구했으나 블레어 영국 정부는 이를 지연시켰다. 아우치는 영국 권력층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 두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우치의 룩셈부르크 은행인 시파프 회사의 이사로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서 대법원부장관을 지낸 라모트 경이 선임되었으며, 과거 영국의 자유당 당수 데이빗 스틸 경은 아우치의 무기회사인 ‘지중해종합부동산측 이사’를 맡는데 동의했다. 아우치는 영국의 현 노동당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즉 지중해종합부동산 회사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아우치는 토니 블레어 총리를 대신한 역만장자 샌즈베리 경으로부터 영국 의회를 그린 유화 한 점을 선물로 받았다. 이 그림에는 영국의 국회의원 1백 명의 서명이 들어있으며, 여기에는 전 보수당 당수인 윌리엄 헤이그, 자유당 당수 찰스 케네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우치는 새로 우정을 쌓은 노동당 소속 케이스 바즈 의원을 지중해종합부동산 이사로 고용했다. 영국정부의 유럽부장관직을 맡고 있는 바즈 의원은 아우치를 대신해서 프랑스 측에 대해 범죄인 인도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아우치는 영국에서 7위에 속하는 부호이다. 아우치는 공식적으로 바트당 당원이며 이라크의 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다. 아우치는 사담 후세인과 함께 1950년대 이라크 총리 암살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받은 바 있다. 아우치는 자신이 바트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여 1980년대 초 영국 및 룩셈부르크에 금융회사 그룹을 설립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다.

1987년 아우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은행가인 바타글리아(Pierfrancesco Pacini Battaglia)와 4년 동안 교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탈리아 ‘깨끗한 손’ 수사팀에게 부패 혐의가 발각되었다. 이 이탈리아 수사팀은 1987년 이라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는 사담 후세인 주도의 거대한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실을 밝혀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양국 공동회사는 아우치와 바타글리아를 동원하여 이 건설계약을 따냈다. “이 계약을 따내는데 평소 중동국가에서 그런 것처럼 이라크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에게 커미션을 제공해야 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중개자는 이라크에서 출생한 아우치였다.”²⁴⁾ 바타글리아는 프랑스 정유회사 임원에게 리베이트로 수백 만 파운드를 전달했으며, 이 리베이트 수수가 엘프사의 통상적인 관행이었고, 당시 엘프사의 임원진은 “엘프사에게 좋은 것은 프랑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²⁵⁾

아우치가 이라크 송유관 건설에서 이렇게 수백만 파운드를 번 것은 쿠웨이트인들이 소유한 스페인 유전지대 판매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새 발에 피였

24) *The Observer*, 6 April 2003.

25) 같은 곳.

다. 스페인 유전 판매 사건은 향후 재판의 핵심에 속한다. 1991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던 당시 이라크 정부는 스페인 정유회사들 중 하나를 팔아 전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유럽 국가들의 까다로운 형식적 절차와 관료주의로 인해서 판매가 지연되자 쿠웨이트인들은 아우치를 중개자로 내세워 이 판매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 했다. 당시 커미션이 비밀리에 아우치에게 전달되었으며, 프랑스 수사관들은 엘프사가 아우치에 전달한 커미션 대부분이 엘프사의 고위직 임원들에게 다시 흘러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엘프사 임원 중 한 사람은 이 거래를 주도한 지르방(Alfred Sirven)이다. 프랑스 수사팀이 보기에 이때 ‘리베이트’가 오갔으며 프랑스 정유회사를 포함한 이 ‘부패망’은 프랑스 정부의 핵심부에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 수사팀은 아우치가 엘프사를 위해 이 거래를 성사시킨 댓가로 총 5십 6억 페세타(스페인 화폐 단위)를 챙겼으며 이 중 2십 4억 페세타를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우치의 은행 비밀계좌를 통해 지르방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우치는 자신이 에르토일사 정유회사 판매 건에서 받은 돈은 모두 합법적인 커미션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²⁶⁾

VIII. 부패 지속의 구조적 원인

1996년 엘프사 사건 수사를 시작한 에바 졸리는 “엘프사 사건의 재판은 한 시대의 정점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징후들을 보건대 프랑스라는 국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은 마치 프랑스 민주주의가 용납할 수 있는 폭로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과 같다”고 썼다. 프랑스 국민, 언론, 사법부는 모두 기진맥진했다. 1996년 경찰관들이 프랑스의 최고위층 인사의 집에 들이닥치던 성급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구시대 인사들이 재판정에 출두하려 법원청사 계단을 오르는 모습은 모두 환멸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패와의 싸움 최전선에 있는 수사관사들도 두 손을 들었다. 프랑스에서 부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 전혀 유행이 아니다. 프랑스 언론은 대신 영국 런던의 시티오브브런던 지역 앵글로-색슨족의 부패상 및 영국의 세금 도피처에서 벌어지는 돈세탁 문제를 공격하며 비난해 마지않는다. 프랑스는 세계 강대국에 속하지만, 프랑스 국가

26) 같은 곳.

지도자들이 과연 정직한가 여부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락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프랑스가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은 국내에서 부패혐의로 기소 당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헌법해석을 왜곡 내지는 건강부회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²⁷⁾

2003년 가을, 프랑스가 EU 안정화협정을 어긴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프랑스 측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습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현재 프랑스 최대 은행인 '리용 크레디트 은행'은 국영은행이던 1990년대 초 경영권 취득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그리고 프랑스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현상 역시, EU 소속 국가들은 모두 공공조달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평평한 운동장' 보장정책을 한낱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 건설회사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그리고 빠리와 브뤼셀 사이에 '가장 빠르다'는 TGV 철도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180억 프랑 중 12억 프랑이 뇌물 및 횡령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1988년에서 1996년까지 빠리 주변의 각급 학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당시 총건설비 280억 프랑 중 5억 6천만 프랑이 정당한 금으로 날아갔다는 수사당국의 추계가 나와 있기도 하다.

프랑스 공직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 동안 외형상 폭로 및 재판들로 인해 처벌받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되어있다. 그리고 여러 새로운 법안들도 통과되었다. 그 많은 횡령 행위들의 뿌리가 되어온 정당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부패는 계속해서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유는 프랑스 사회의 본질,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 사법제도 및 언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부패라는 게 처벌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공직부패 관련 인사들은 전체 집단이 외형상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개별 회사는 어떤 영향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프랑스 엘리트계급은 영국이나 미국의 엘리트계급과는 전혀 다르다. 즉 프랑스 엘리트 계급은 한결같이 규모는 매우 작지만 그 유명한 그랑제꼴 출신들로서, 응집력과 단합이 확고하게 다져져있는 집단이다. 프랑스 그랑제꼴은 졸업 후 장관을 하고, 그러다가 다국적 기업 사장으로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 그와는 거꾸로 할 수

27) 현행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 기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임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롤랑 뒤마와 헌법재판소 측은 대통령의 경우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뒤마는 시락의 정적이지만 시락이 엘프사 재판사건을 둘러싸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프랑스 엘리트 계급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특성은 부패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것은 최근 프랑스 정치는 초의 회적이며 기존체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흐름이 주도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극우인 민족전선 측이 전체 인구의 15%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극좌 및 반세계화 진영은 10%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이 흐름이 프랑스 엘리트계급의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하고 있다. 프랑스 엘리트계급은 일련의 반부패 재판을 통해 과오를 깨달으며 처벌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주모자급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IX. 정치부패와 사법부의 역할

에바 졸리에 따르면 신생국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모든 국가에서 정치부패와 돈세탁 수사는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하무라비 법전 이래로 역사적으로 형법의 근간은 도둑을 추적하는데 있지 엘리트 계급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²⁸⁾ 미국과 앵글로-색슨족 등지의 보통법이나 로마법을 따르는 대륙법을 막론하고, 형법상 중요한 증언이란 ‘내가 이 도둑이 훔치는 것을 보았소’라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경제범죄에 속하는 부패범죄란 증언이나 목격자가 없으며, 부패 범죄란 워낙 은밀하게 저질러지며 은폐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제범죄의 경우 증거제시의 부담을 역전시켜야 한다. 예컨대 현재 프랑스 기소 담당자의 경우 어떤 인사가 조직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며, 해당 인사는 자기 재산과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기소가 한결 더 용이해진다는 점을 뜻한다.

프랑스의 경우, 2001년 4월 경제범죄를 포함하여 조직범죄에 있어서 증거제시의 부담 주체를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즉 기소 담당자는 어떤 한 사람이 조직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며, 이 경우 혐의자는 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노르웨이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즉 새로 시행되고 있는 노르웨이 형법 제317조에 따르면 예컨대 어떤 사람이 1백만 프랑을 횡령한 부패혐의가 있는 중대범죄가 확정

28) Round Table: Anti-Corruption in Bulgaria – the Role of Judiciary and the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18 Oct 2002,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Bulgaria.

되고 그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혐의자는 그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출처가 합법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 범죄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활동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 기소담당자들이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가 하나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체포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그 출처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파산직 전 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경우, 수사관은 ‘당신은 다른 돈과 재산들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라고 신문할 수 있다. 이것은 혐의자가 단지 한 가지 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유죄가 확정된 자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에바 졸리는 불가리아도 이 방안을 도입하라고 권유한다. 부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지도 기실 국가 전체적으로 부를 흠친 소수 인사들로 인해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부자들은 외국 투자자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불가리아처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에서, 유죄로 감옥에 가며 재산을 환수 당해야 하는 측면이 능히 생길 수 있다. 에바 졸리는 불가리아가 이렇게 부패적결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부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며 그런 방식이 인권을 침해하며 낡은 사회주의 통치 방식과 다름없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패에 물든 인사들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OECD 국제거래상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금지 협약에 서명한 나라로서 유럽국가들과 발맞추어 새로운 관련을 법률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진 못한 실정이다. 2000년 ‘불가리아 민주주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불가리아 국민들 절대다수인 82%는 자신들이 매우 부패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바 졸리는 국제 투자자들 역시 여론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불가리아는 부패적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대 국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인과 정책결정자 위치에 있는 모든 인사들의 수입과 재산 내역이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모든 시민들의 소득과 수입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상대방의 소득이 어떤지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방조치도 중요하며, 예컨대 온갖 부패가 발생하는 민영화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며 양질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가 부패 척결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에바 졸리는 불가리아가 사법부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불가리아 사법 예산은 유럽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다(사법분야 예산이 불가리아는 GDP의 0.3, 노르웨이는 3%, 프랑스는 1.6%라고 함). 이렇게 예산이 작은 불가리아 사법부는 수사나 기소가 매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유능한 경찰관, 양질의 기소 담당자(검사)와 판사 등이 부패척결에 있어서 매우 긴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²⁹⁾ 에바 졸리는 프랑스에서 경찰 측의 범죄단 전화도청 과정에서 우연하게 밝혀낸 한 기소 담당자의 부패사건을 하나 정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판사가 이 기소 담당자에 수사를 벌여 마침내 이 기소 담당자는 퇴직 때까지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기소 담당자가 단지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된 매우 '사소한' 부패 사건에 연루된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자격정지 조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나 노르웨이 국민들 중 누구도 사법부 전체가 부패했다고 보진 않는다.

에바 졸리는 오히려 불가리아 인사들에게 사법부가 업무량이 과중하며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나 기소, 재판을 일정기간 내에 마치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엄청난 사면효과만을 낳는다고 불가리아의 실태가 어떤지 물었다. 기간 제한은 사법부 역량이 제대로 갖춰질 때라야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이탈리아가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 수사판사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항소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한 암살범을 석방해야 한 적이 있었다. 에바 졸리는 이런 일이 결코 벌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바 졸리가 2003년 주도한 파리선언의 핵심은 온갖 형태의 면책(impunity) 규정으로 인해 반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첫째 실효성 있으며 공정한 반부패 수사를 위한 조치, 둘째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고 거꾸로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셋째 부패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각종 방안들을 제안했다.³⁰⁾

이중 첫째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각료, 국회의원, 외교관, 법관과 검사와 법조인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온갖 형태의 예외조항이나 면책특권 등을 철폐하며, 다른 나라 사법당국에 대해 증거를 전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수사방해 목적의 남용 사례가 없도록 하고, 피고가 결심공판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29) 같은 곳.

30) www.parisdeclaration.org.

이유로도 재판을 조기종결토록 어떠한 법률적 제약도 가해서는 안되며, 각급 은행측이 어느 나라 정부측에 대해서도 보조금이나 거래관계를 열어 그 나라 정부가 국제사법공조의 완전한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래관계를 트는 것은 금지토록 하고, 각급 은행과 금융기관은 모든 수취인 및 이체를 지시한 사람의 완전한 신원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은행간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변호사가 범죄자가 부패를 통해 얻은 수익의 돈세탁에 관여한다고 판단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 변호사와 형사피의자간에서 나타나는 직업상의 특권은 철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급 정부는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해명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 법에 의해 재산 축적에 대해 믿을 만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법원 측을 납득시키는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을 몰수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중대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 부패행위로 인해 국가와 시민들이 당한 심각한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기업은 소유 기업이 위치해 있는 각국에게 지급한 순수익(세금, 로열티, 수수료, 보너스, 배당금 등)에 대한 통합회계를 공개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간 자본이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며, 다국적 기업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사법상의 관할권이 행사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부패 혐의가 있는 보조금 지급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신 범죄가 저질러진 나라는 사건을 추적하는 권한이나 의사를 갖지 못하게 하고, 각급 은행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기업 임원진 등 중대한 부패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인사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시를 강화하며 부패행위에 연루된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X. 시사점

프랑스 정치부패의 수사대상은 미테랑 정권 시절 저질러진 부패나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치인 및 외국의 지도자, 프랑스 국내외 기업인과 뒤마의 애인으로서 로비스트인 종꾸르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대선자금 등의 수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및 이를 받은 정치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기업인이나 지도자가 우리나라 정치부패와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정치부패의 뿌리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모두 친일과나 적산 처리 과정에서 치부한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전달과정에서 배분한다거나 하는 행태는 양국이 모두 유사하다. 부패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불법자금의 경우 삼성, SK, 현대 등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모두 합쳐 1천억 원 대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라고 하는 엘프사 불법자금의 경우 4억 유로(한화 약 6천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정치부패 수사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모두 언론을 통하여 의견상 비쳐지는 여론의 흐름과는 달리 실제로 정치지형을 뒤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정치자금법 제개정을 가져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 제개정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공히 정치자금 수사를 희석화시키고 마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초 TV를 통해 ‘평검사와 대화’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 측면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선 후보 당사자(이회창, 노무현)의 불법 부분에 대해 드러난 게 아직 없다. 반면, 프랑스 시락 대통령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 프리깃함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기밀로 분류함으로써 핵심 정치인 수사를 원천봉쇄했다.

수사주체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특별기관 신설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며, 특정언론의 비호 아래, 이른바 ‘탈옥사건’(서청원), ‘방탄국회’, 방탄 특검 등의 형태로 저항을 계속했던 것과 유사하게, 프랑스의 경우에도 언론이 정치부패 수사에 대해 공세를 펴며 정치권과 사법계 일각에서 수사판사 제도 그 자체의 존폐 논란을 벌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기존 수사판사나 검찰의 정치부패 수사에 대하여 정치권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의 향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심층 탐사보도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른바 ‘5백억 대 0’이라는 일방적 수사로 승자위주의 보복수사라면서 결과적으로 ‘차떼기당’을 옹호해온 전력이 있다. 프랑스 언론의 경우에도 외국인 혹은 기득권의 부패에 대한 심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이 조세측면 등에서 사실상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언론도 전통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다.

정치부패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수사 기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안기부자금 수사, 삼성비자금 출처, 정몽헌 사장 자살, 현대 대북지원 등의 사례들이 있긴 하나,

실제로 장기적으로 수사하는 정치부패 사건은 두드러진 게 그다지 없다. 반면 프랑스의 엘프사 사건의 경우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며 혐의자가 많아 에바 졸리의 수사팀이 8년여 동안이나 수사해야 했다.

한편, 우리나라 검사가 사표를 내고 수사를 중단 당한 사건에 대해 받은 압력 등을 정직하게 회고록으로 펴내거나 반부패 투쟁에 앞장 선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2002년 대선자금을 수사한 안대희 검사의 경우 2004년 국제검사회(IPA)에서 공로상을 받긴 했으나, 검사 혹은 검사 출신 변호사 중 검찰의 기소권 독점 철폐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향의 검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오히려 검사직을 그만 두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거나,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등 계속해서 기득권 구조 속에 머무는 경우가 통례이다.

반면 프랑스의 에바 졸리는 2002년 사임 이후 엘프사 사건 수사에서 받은 온갖 형태의 압력들에 대해 폭로하고 이어서 2003년 6월 빠리선언을 주도했다. 당시 2003년 빠리선언은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투쟁하자는 세계적 차원의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서, 여기에는 칠레의 피노체트 단죄를 시도한 스페인의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 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콜롬비아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억류상태에 빠진 잉그리드 베탄쿠르의 모친 요란다 폴레시오, 캐나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존 찰스 폴라니 등이 참석했으며, 25명의 저명인사들이 서명했다. 프랑스 수사관사직을 사임한 에바 졸리는 노르웨이 정부(외무부와 법무부)의 반부패 및 돈세탁 문제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를 돌며 국제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부패 수사와 그 처벌은 그 자체로 법 집행의 일환이긴 하나, 정치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선거나 혁명을 통한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때 국민들이 정치부패 인사를 당선시키느냐 낙선시키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치부패 근절은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친일파나 적산 처리, 근대화 과정(이병철 밀수사건, 한일협상비리) 등에서 빚어지는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의 지속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논문은 프랑스 정치부패에 대해 에바 졸리의 수사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프랑스 정치부패 일반론에 대해서는 그 분석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이에 대한 연구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문환, 프랑스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김종구, 형사사법개혁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법적 모색, 법문사, 2004.
-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I), 20004.
-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II), 2004.
- 마리-안느 꼬앙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과 동거정부, 이창훈편,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아셈연구원·한국프랑스정치학회, 2004, pp. 61-98.
- 법무부, 프랑스의 사법제도, 1997.
-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Round Table: Anti-Corruption in Bulgaria – the Role of Judiciary and the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18 Oct 2002, Bulgaria.
- Eva Joly (with Laurent Beccaria), *Notre affaire a tous*, Les Arenes, 2000.
- Eva Joly (with Laurent Beccaria), *Est-ce dans ce monde-la que nous voulons vivre?*, Les Arenes, 2003.
-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7 March 2002.
- Independent*, 26 Jan 2002.
- Keith Lee, “Total oil in France’s biggest postwar financial scandal,” World Socialist Web Site, www.wsws.org, 11 July 2003.
- The Observer*, 6 April 2003.
- Robert Neild, *Public Corruption*, London: Anthem Press, 2002, pp. 33-44.
- Philip Delves Broughton, Elf Warning, *Spectator*, 25 Jul 2003.
- Tim King, French Favours, *Prospect* Jan 2004, pp. 24-31.

저자약력 :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박사,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초대회장, 런던 정치경제대 연구교수, 경기대 강사, 현재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